늦어지는 2차 여야 대표회담…민주 “신속히 만나자”

이재명 “문제 드러내놓고 대화를”
‘김건희 특검법’ 주요의제 올릴 듯
국힘, 특별감찰관 결정 의총 우선
양측 현안 시각차 커 성과엔 의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회담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양당 대표 회담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3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보수 진영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을 가진 뒤, 한동훈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다시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지금 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다.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이렇게 서로 적대적으로 가는 상황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자주 만나야 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상황이 나쁘고 서로 껄끄러울수록 만나서 문제들을 다 드러내 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헌정 위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 대표님, 어렵겠지만 자주 보면 좋겠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주 안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고 말했는데 비서실장들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있지 않나”라고 재차 압박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여권 내부 갈등 요소인 김건희 특검법을 회담 의제로 다루는 것 만으로도 여권 내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한 대표와 특검법 협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 회담을 갖자는 입장이지만, 한 대표 측이 선뜻 일정을 잡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정한 뒤,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대표 회담 의제로 ‘김건희 특검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없이 회담장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특별감찰관 도입 여부를 결정한 뒤에야 여야 대표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양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당초 예상됐던 양당 대표 회담은 빨라야 11월 중순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면 ‘김건희 특검법’을 주요 의제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 대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주요 의제로 생각하는 현안이 서로 다른 만큼, 2차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시당 “역사박물관, 5·18 왜곡 책자 폐기”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5·18 역사를 왜곡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를 즉각 폐기하고 발간 경위 조사와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30일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책무를 가진 국가기관이 일제를 미화하고 5·18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7월 ‘대한민국 100년 통사’를 발간했다. 책에서 저자 김진현은 ‘일본이 한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고 서술했다.

저자가 인용한 원본 책과는 달리 이 책에 수록된 지도들은 대부분 독도가 빠지기도 했다.

광주시당은 “김진현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건국절’ 논란을 일으킨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위 ‘뉴라이트’ 인사를 국가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해 초래되는 반역사적 사례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도가 빠진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넘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가기관이 나서서 일제를 미화하고 5·18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책 폐기와 책임자 문책을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충환(오른쪽 네 번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시도의회의장협, 광주시의회 제안 건의안 가결

전기철도 전기요금 개선안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기철도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철도 관련 건의안은 철도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해 종별 전기요금 신설이 필요하고 최대 수요 전력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충남 보령에서 임시회를 열고 총 11건의 건의안을 의결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신 의장은 “한국전력공사가 원가 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여러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철도 운영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철도는 대중교통이자 공공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 목적 교육용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한동훈 “당정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 가능”

당 대표 취임100일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관련 우려·걱정”

한동훈(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 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2년 반의 당과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 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가 찾아 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한다.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진 일문일답에서, 한 대표는 ‘국민 실망과 우려에 김건희 여사가 주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안도걸 “지역화폐 추가 발행 위해 2조 지원해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30일 정부가 최근 보고한 ‘20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고 2조원 지원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10조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도록 하고, 20%의 할인 비용으로 2조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재원은 금년도 예비비 잔여액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조달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번 세수결손에 동원된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여유재원은 유사시 예금 인출에 대비한 적립금 성격인데, 이를 갖다 쓰는 것은 기금 건전성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을 45조원이나 빼내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자금을 빼내어 써버리면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 대처능력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

위원장에 서영교 임명
이태원참사특위도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권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고 단장으로 4선의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작과 국정개입 등 명태균 관련 의혹이 날로 확산됨에 따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을 설치하고 위원장으로는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일파만파 커지는 국정농단 의혹을 샅샅이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후속 대책, 피해자·유가족 연대, 추모·기억 사업 지원을 위한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장으로는 남인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교흥·박주민·이해식 의원이 임명됐다.

황 대변인은 “2년 전 참사의 아픔을 기억함과 동시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